

# 아특별 개정 이후 문화전당 어디로 가야 하나?

○ 일 시 | 2021. 5. 6 (목) 오후 2시

○ 장 소 |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

○ 주 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0	5'	환영사, 축사	주최측
14:10~14:40	30'	< 주제 발표 > -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	<진행 : 좌장> 발제자
14:40~15:30	50'	< 지정 토론 > - 황병하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 조덕진 무등일보 논설실장 -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 - 정두용 (사)청년문화허브 대표	토론자 (발제자 보충의견)
15:30~16:00	30'	< 종합 토론 >	전체 (청중질의 등)

## ◆ 자료구성

### | 발제자 |

※ 좌 장 : 송 진 희 (호남대학교 교수, 조성위원회 부위원장)

김 기 곤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      .....      3

### | 토론자 |

황 병 하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      19

류 봉 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

김 지 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      21

조 덕 진      무등일보 논설실장      .....      25

이 당 금      푸른연극마을 대표      .....      27

정 두 용      (사)청년문화허브 대표      .....      29

## 발제

# 아특법 개정 이후, 문화전당의 전환을 위한 방향과 과제

김기곤 |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



- 국가인권위원회 문화권 전문위원
-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증진위원회 위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시민문화예술분과위원장
- 인권과 문화 등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의  
대안적 사회 및 문화정책에 관심

## 아특별 개정 이후, 문화전당의 전환을 위한 방향과 과제

김기곤 |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

### 1. 들어가며

국립중앙박물관 대비 1.2배 규모, 국내 최대 융복합 문화예술 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하 '문화전당')이 개관(2015년 11월)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문화전당 운영 국가기관 5년 연장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2020년 6월 9일 첫 발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별 개정안')이 2021년 2월 26일 제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문체부는 아특별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TF를 구성하고 전당장 선임과 더불어 조직개편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밝힌 아특별 개정안 후속조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 문화전당 조직개편 : 직제개정안 마련(3월), 행안부 협의(3~5월), 직제개정(~6월)
- 문화전당 인력충원 : 직제개정 후 신규인력(학예·전문경력직)은 8월 채용 완료, 법 시행일(9월)에 맞춰 정식 임용
- 문화전당 재단 설립 : 재단 정원 기재부 협의('21.3~4월), 설립추진단 및 설립이사회 구성('21.4~6월), 재단 정관 및 제규정 마련('21.6~7월), 고용승계 등('21.7~8월), 정관 승인 및 법인 등기('21.8월말), 인력배치 및 사무인수('21.8~9월)

### 2. 아특별 개정안의 의미와 주요내용

#### 1) 개정의 의미

아특별법은 지난 2015년 3월 13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인화를 목표로 개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문화전당을 정부조직으로 설립하고 일부 업무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러한 '문화전당 조직의 이원화'는 전당 내부의 운영 갈등, 리더십 부재, 콘텐츠 부실 등 문화전당을 둘러싼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당시 개정된 법은 문화전당을 법인에 5년 동안 '부분위탁'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부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개관 5년 동안 전당장도 없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도 전에 법인화로 내몰릴 상황이었다.

이번 아특법 개정안 마련은 그동안 아특법 개정을 놓고 일었던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서 문화전당의 안정적인 조직 기반 구축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당의 위상과 운영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상당정도 해소할 수도 있게 되었다.

국가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전당의 서비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당의 콘텐츠 생산 과정, 콘텐츠 생산물의 활용 등 모든 분야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 마련은 공공성 대표적 실현자인 국가의 책임 아래서 문화전당이 공공성이 강한 콘텐츠 창·제작,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개정의 주요 내용

아특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시아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문화전당이 흡수·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적 사업의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전당재단')을 설립해 수행한다는 것도 주요내용이다.

또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와 아특법 효력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한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유효기간 연장은 국비지원과 사업 진척도가 더딘 광주지역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재원 투입과 지속성 유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sup>1)</sup> 아특법 개정안의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아특법 유효기간 5년 연장으로 인해 아특회계 재원 투입이 2031년까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핵심인 5대 문화권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문화도시 광주로서의 실행 동력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특회계 국비지원 상황을 보면, 현재 국가 직접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에는 96.4%가 지원된 반면 지자체 보조사업은 당초 목표대비 19.5%만 지원된 상황이다. 2021년 지자체 국비 보조 지원은 광주대표 문화마을 조성,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플랫폼, 파사드 콘텐츠 개발, 스마트 문화 체험존 조성, 아시아 예술 인재 양성 거점 공간 조성 등 총 31개 사업에 1,442억 원이 반영됐다.(광주시 내부 자료)

&lt;표 1&gt;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964호, 2021. 3. 23., 일부개정]
<b>제26조의2(국제협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b>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원을 통한 국제협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삭 제>
<b>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①</b>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운영한다.  ②·③ (생략) ④ 문화전당은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제28조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①</b>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홍보·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제작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운영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문화전당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제27조의2(국가의 재정지원) ①</b> 국가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산정한다.	<삭 제>
<b>제28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 ①</b>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의 연구·홍보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제작 및 유통 3.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b>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①</b> 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p>④ 문화원에는 문화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할 원장을 두며, 원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⑤ 국가는 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⑥ 문화원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⑦ 국가는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문화원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p>	<p>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유통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p> <p>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p>
---	--

<p><b>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b> ①·② (생략)</p> <p>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lt;신 설&gt; 9. (생략)</p> <p>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문화전당의 설립·운영, 문화원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6. ~ 10. (생략)</p>	<p><b>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b>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9. (현행과 같음)</p> <p>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문화전당의 설립·운영, 문화재단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6. ~ 10. (현행과 같음)</p>
--	---

<p><b>제54조(과태료)</b> ① (생략)</p> <p>② 제28조제9항을 위반하여 아시아문화원이 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p>④ ~ ⑥ (생략)</p>	<p><b>제54조(과태료)</b> ①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p>
--	---

<출처: 법제처>

### 3. 후속조치의 방향과 주요 사항

아특별 개정안에는 전문인력 대폭 충원, 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이 축적해 온 유무형의 자산의 승계 문제 등을 담은 부칙이 삭제된 점은 우려할 사항이다. 문화전당의 기능과 역할 확대, 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확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이후 후속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가야 한다.

지난 2015년 3월 아특별 개정안 이후에 정부의 일방적인 후속조치와 지역 사회의 대응의 부재로 문화전당이 불안정한 상태로 운영되어왔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문화전당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후속조치는 문화전당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 법과 제도, 조직과 인력, 조직운영 원리와 문화 구축 등 운영체제 전반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문화전당의 정상화는 문화전당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활성화는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문화전당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운영의 전문성과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은 문화전당이 조성사업의 핵심영역이라는 점에서 전당에 관한 후속조치는 조성사업과 연관지어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문화전당의 위상과 의미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 이는 문화전당이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진행된 조성사업의 기구 및 사업 축소에 따라 문화전당의 약화된 위상을 강화하고 떨어진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문화전당의 운영 기반을 확대 구축해야 한다. 조성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일정을 고려한다면, 문화전당은 자신의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로 활발하게 확산하는 단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해야 한다. 그동안 콘텐츠 창제작 등 주요 분야의 운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그것을 국내외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대 재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문화전당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유무형의 자산이 빠짐없이 승계되어야 한다. 문화전당을 공공성의 대표적 실현자인 국가기관이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적기관이 실현해야 할 다양한 가치를 복합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문화전당 운영 과정의 업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이 새로운 전당체계 안으로 제대로 승계되어야 한다. 문화전당은 문화,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확산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넷째, 문화전당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가야 한다. 문화전당의 시설과 프로그램 등은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었다. 문화전당이 지역의 인력과 문화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과의 공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해야 한다.

후속조치는 이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 재편, 문화전당재단 설립, 혁신적인 조직문화 형성 등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전당이 준비해야 할 세부 후속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표 2> 아특법 개정 이후 주요영역별 조치사항

주요 영역	세부 후속조치 과제
현 조직체계 정비사항	- 아시아문화원 해산 및 인적·물적 조직 승계문제 협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 총원 및 조직도 개편(직제규정 정비) ※ 각 직종별 적정 수, 직종별 인적 운영 방안 검토 - 수익사업 운영 방안 검토(국유재산 위탁, 대부 등 검토)
문체부 내 조치사항	-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규정 정비안 마련 - 문체부 내 조직 개편안 및 예산 확보 방안 모색 - 기재부, 행안부와 조직 개편 관련 협의 -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회 협의
중앙부처 간 협의 및 결정사항	- 기재부와 필요 예산 및 향후 예산 증액 방안 협의 - 기재부와 문화전당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 협의 - 행안부와 인적 구성에 대한 방안 협의(정원 산정 및 아시아문화원 인력 승계 등) - 법제처와 시행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에 대한 협의 - 국회에 예산안 심의 후 예산안 통과 - 기타 필요 행정규칙 제·개정 절차 진행
광주시 및 지역사회와 협의 사항	-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방안 검토 및 협력 장치 논의 - 광주지역 시민사회와 협의를 위한 논의 구조 마련 - 기존 문화전당-문체부-광주시 간의 협력 장치 보완 및 활성화 논의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315)를 토대로 재구성.

### 3. 문화전당의 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

#### 1) 운영 조직과 인력의 확대 재구축

##### □ 조직과 인력의 확대

문화전당 설립 초기, 거대 규모의 복합문화예술기관인 문화전당의 운영을 위해서는 약 4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채용 인력은 이 추정치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2015년 아특법 개정안 당시 문체부에서는 정규직의 규모를 문화전당 100명, 아시아문화원 200명을 요구했지만 행안부에서는 인원을 그 절반으로 축소했다. 이 인원은 문화전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는 데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다.

2021년 현재 문화전당은 1전당장 4과(기획운영과, 연구교류과, 문화창조과, 시설관리과) 체제에서 322명(정원 기준)이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48명이 정규직(일반공무원 32명, 임기제 전문위원 16명)이며, 270명이 공무원(무기계약직)이다. 이들은 문화전당 운영 기본정책·계획 수립,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협력 활성화,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작·개발, 아시아문화원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은 1원장, 4본부, 1연구소, 1센터, 17팀 체제에서 249명(정원 기준)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97명, 공무직은 153명이다. 이들은 문화전당 운영·수탁 업무, 수익사업, 콘텐츠 창·제작 및 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문체부가 의뢰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현황분석 및 향후 운영 방안 연구』 용역에는 문화전당 운영 방식(유형)에 따른 적정인원을 산정한 결과가 담겨 있다(<표 3> 참고).

<표 3> 문화전당 운영 방식별 조직 및 인력 규모

구분	조직 및 인력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4개과 조직편제 유지</li> <li>- 기획운영과/시설관리과/연구교류과/문화창조과</li> <li>○ 국가기관 조직의 안정적 변화 고려</li> <li>○ 적정인원</li> </ul>			
	일반직 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직	합계(명)
	45	96	240	381
공공기관 (특수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중심 4개 본부 편제</li> <li>- 경영혁신본부/연구교류본부/콘텐츠본부/교육본부</li> <li>○ 특수법인으로서 핵심기능 강화한 조직구성 가능</li> <li>○ 적정인원</li> </ul>			
	정규직	공무직	합계(명)	
	188	240	428	
국가+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간 R&amp;R 정비, 대민서비스 기능 강화 고려</li> <li>○ 중복·분산된 대민서비스 기능의 통합</li> <li>○ 적정인원(문화전당)</li> </ul>			
	일반직 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직	합계(명)
	35	16	8	59
	○ 적정인원(아시아문화원)			
	정규직	공무직	합계(명)	
152	218	370		

\* 출처: 문체부(2019, 309) 재구성.

문화전당의 적정인력은 업무 기능 조정 여부, 조직 편제 결과 등에 따라 그 규모가 정해지겠지만,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화전당의 운영 방식과 상관없이 단순 산술해 보더라도 필요 인원은 381명~429명 정도가 된다.

또한, 2014년 문화전당 개관 1년을 앞두고 문체부가 용역 의뢰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방안 연구』에서는 문화전당의 최적화된 인력 규모를 482명으로 잡고 있다. 또한 문화전당의 5개원의 공통 기능을 통합관리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최소화한 인력 규모는 423명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문화전당의 인력은 최소 381명, 최대 482명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문화전당의 인력 규모는 전당 기능의 효율성 제고(중복된 핵심 기능의 통합 등) 등을 위해 부분적인 업무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단위별 조직의 감소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 조성된 문화적 환경과 문화적 수요를 고려하면 전당의 인력은 확대 보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문화의 기능과 문화정책대상은 사회의 여러 영역과 융합되어 문화 관련 범위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환적 삶을 위해 한국형 문화 뉴딜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하고 문화전당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잡아야 할 필요도 있다. 지역차원에서는 문화전당의 문화콘텐츠 창제작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전당의 운영 효과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아시아문화원이라는 별도의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던 기능이 국가기관인 문화전당으로 통합됨에 따라, 문화전당을 직접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역량(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인력 구성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문화지형이 변화하고, 문화전당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문화전당의 조직과 인력은 효율화를 지향하는 '축소 지향'이 아니라, 문화전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확대 지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상하고 있는 문화전당 직제 편성 방식 및 인력 운용 규모는 이와 같이 전당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및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 편성되어야 한다. 그것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근거는 앞서 진행된 선행적 연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아특법 개정 당시 운영 조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지 못해 문화전당 개관 이후 많은 문제에 직면해 온 만큼, 이 번 후속조치 단계에서는 향후 정착해 나갈 조직 체계를 더욱 면밀하게 구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 아시아문화원 인력의 고용승계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아시아문화원의 인력의 고용승계이다. 문화원의 고용승계는 문화전당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방식, 신설되는 전당재단의 정원 내로 고용 승계하는 방식 등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해야 할 원칙은 아시아문화원이 쌓아온 문화 업무 경험을 지역의 중요한 문화역량이자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유지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인력의 승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과를 연속적으로 계승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제도적 기준만을 강조하는 제한적인 고용승계는 공공성의 대표적 실현자라고 하는 국가의 운영 가치와도 맞지 않다. 문화전당 역시 국가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용승계 문제를 시민의 노동권 보장과 연관시켜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조직될 문화전당재단 설립추진단 구성과 운영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설립추진단에는 지역의 이러한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인사의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 □ 전당장의 직급과 채용

문화전당 조직 체제 구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사실 전당장의 직급 설정과 신속한 채용이다. 문화전당의 규모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전당장의 직급은 차관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조직 구성의 원리상으로 보면 기관장의 직급은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으로 국가기관 운영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전당장의 직급이 전당의 조직 규모 설정, 그리고 역할과 기능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직의 위계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전당장의 직급이 높을수록 위계적으로 편재되는 조직의 하위 직급은 다양하고 구성 인원 역시 많아지게 된다. 차관급으로 높이라는 주장이 단순히 문화전당의 위상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문화전당장은 전문임기제 가급이다. 전당장의 위상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 고위공무원 가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부여해 기관장 상설 소속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전문임기제를 일반 개방형 직위(민간, 공무원 가능)로 전환해야 한다. 행안부·인사혁신처 등과 고위공무원단 정원 확보 및 개방형 직위 전환을 협의해야 하는 과정도 이어져야 한다.

## 2) 지역과의 협력

### □ 기능적 협력에서 '협력의 제도화'로

문화전당이 협력해야 할 지역의 대상은 광범위하다. 광주, 국가, 아시아 등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문화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과의 협력은 중요한 사항이다. 문화전당이 광주에 위치해 있어서가 아니라 문화전당의 구동 원리와 운영 철학이 광주의 장소성과 역사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전당이 광주와 협력한다는 것은 단지 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논의와 실행 그 이상을 의미한다. 보편 가치와 목표의 공유를 기반으로 문화전당과 광주지역이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의 관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협력의 본질이다.

그동안 문화전당과 지역사회는 협력을 위한 다양한 장치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문화전당 개관 이후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 콘텐츠 협력체계 구축회의', '광주시-문화전당-전라남도 정례협의회', '광주시-문화전당 정례협의회', '문체부(문화예술정책실)-광주시 정책협의회', 문화전당의 지역협력 프로그램 등이다.

문화전당과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협력의 제도화'는 협력을 위한 법과 장치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협력의 경험을 축적해 상시적인 소통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실행하는 익숙한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의 제도화는 필요에 따라 혹은 요구에 따라 만나는 '기능적 협력'과는 차원을 달리 해야 한다.

문화전당이 광주지역과 왜 협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적 당위성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술적 실행력이 결합되었을 때 문화전당과 조성사업은 정상화와 활성화의 길을 열어가갈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의 구성 원리는 문화전당의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과의 협력과 교류를 다원화하고 이를 종합 관리할 수는 조직과 인력을 문화전당 내부에 재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 □ 5개원이 참여하는 효과창출형의 협력

지역협력은 문화창조원 등 문화전당의 5개원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협력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지역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의 위상을 높여 재조직하고, 이 부서가 지역협력에 관한 기획과 종합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 5개원의 지역협력 담당인력이 참여하는 포괄적 지역협력 운영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요 기능 중심의 전당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현재와 같이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의 지역협력팀 같은 특정 부서에서 도맡아 추진하는 협력은 문화전당 운영의 효과를 지역 내로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 옛 도청복원 등 이슈 중심의 분야별·사안별 협력이나 특정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기능적 협력으로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화전당 내부에서부터 지역협력에 대한 칸막이를 없애고 문화전당의 핵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포괄적인 지역협력 거버넌스가 작동해야 한다.

문화전당과 광주지역이 문화, 경제, 사회적인 공생관계를 정립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공동으로 창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창제작을 중심으로 한 문화전당의 기능 활성화와 그것의 효과를 지역내부로 확산하는 실질적인 효과 창출형 협력을 기획해야 한다. 지역의 인력과 자원이 문화전당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협력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창조원의 창제작 과정에 지역의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주요 기관, 즉 5개원의 공간, 시설, 장비 등이 지역과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 각 단위에서 문화전당과 지역이 협력하는 장치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가동되어야 한다.

효과 창출형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목적과 구성을 달리해야 하고, 협력의 실질적인 당사자도 광범위해져야 한다. 광주시, 5·18 관련기관 및 주체가 주도하는 정책과 이슈 중심의 협력에서 지역예술가, 청년문화기획자, 창제작엔지니어, 혁신기업가 등으로 확대해 전당의 각 기관에서 지역협력의 효과를 실질화하기 위한 단위별 협력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는 조성사업과 전당 운영에 관한 주요 이슈를 공론화하고 해결 과제를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단위에서 문화전당과 지역이 협력하는 장치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가동되어야 한다.

특히 광주지역 시민사회영역에서는 문화전당을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한 핵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의 문화역량 강화하기 위한 지역 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역예술가와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동기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문화전당과 지역이 협력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문화전당을 지역사회에서 익숙하고 의미 있는 장소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마음과 일상 속에 '문화적 역량'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 3) 문화전당과 문화전당재단과의 관계 설정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산업콘텐츠 개발과 유통의 거점 공간, 즉 문화발전소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익모델의 발굴과 다양한 수익사업의 전개가 가능해야 한다. 아특법 개정안 마련으로 이러한 구상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문화전당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보다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아특법 개정안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일원화된 운영체제를 지향한 것이지만 형식상으로 보면, 별도의 문화전당재단의 설립하게 되어 있어, 밖으로는 2개의 조직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라는 이원화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를 재연하지는 않겠지만 두 조직과의 관계는 엄밀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각각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평적 의존과 수직적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두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고, 업무 수행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당재단의 업무 범위가 단순 수익 창출사업 영역 이 외에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콘텐츠 활용·유통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편성과 인력 배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당재단은 수익사업 전문 기관이라는 점에서 문화전당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료, 시설대관, 편의시설 운영 등 단순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문화상품, 문화콘텐츠 기획판매 등 문화전당만의 경제적 수익창출 모델을 개발해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문화전당은 원래의 역할 중에는 문화산업콘텐츠의 제작, 활용,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 내부에서는 전당재단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문화전당이 공공기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한만큼 수익모델에서도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혁신 모델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문화전당과 문화전당재단이 어떻게 분담하고 상호협력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 4. 맺음말

아특별 개정 이후 문화전당은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다.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문화예술 관련 경영, 창작, 교류 등의 경험을 문화적 자산으로 한 데 모으고,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산으로 계승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화전당은 기존의 아시아문화원의 인력과 기능을 흡수해 통합조직으로 새로 출발하기 때문에 조직내부의 통합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전당의 위상과 역할, 문화전당장의 경영철학, 혁신적인 문화행정 시스템 운영, 지역과의 협력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화전당만의 혁신적인 조직문화와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을 새로운 조직 구성원이 합의하고 숙지했을 때 문화전당만의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문화는 조직이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어떻게 효과적 실현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문화전당의 주요 역할인 문화국가이미지 창출, 지역사회 문화경제 활성화, 시민의 문화권 증진 등은 조직문화 형성과 조직 운영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문화전당이 국가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위상과 규모의 확대, 안정적인 예산 확보, 수익성에 대한 부담 완화, 다양한 영역의 공공성 추구 등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획득했다. 하지만 문화기관이 국가기관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단점, 즉 전문성의 약화, 관료적 의사결정체계, 보직순환으로 인한 책임성과 업무의 연속성 약화, 수입금 활용과 운영의 제도적 제약, 민간 후원 유치의 제약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또한 유무형의 형태로 문화전당 내부에서 작동해 왔던 3개의 분할 구도, 즉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간의 분할, 문화전당 내부에서 5:18과 문화의 분할, 문화전당과 지역사회와의 분할 등 3중 분할 구도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관련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시대적 가치, 즉 문화예술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신운영모델 창출하는 것도 무거운 숙제가 되었다.

.아특별 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전당 운영의 정상화와 활성화이다. 문화전당의 체제를 정비하고 운영 동력을 확보해 조성사업의 원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의 전향적인 재편, 혁신적인 운영모델 창출, 지역과의 협력의 제도화 등에 관한 후속조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기곤, 20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년의 성과와 과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주년 시민대토론회』 자료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문화체육관광부, 201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현황분석 및 향후 운영 방안 연구』.

◎ M E M O ◎

# 토론

## 황 병 하 |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이사(부회장)
- 아시아문화포럼 자문위원
- 광주문화재단 이사
- 광주국제교류센터 이사

## 류 봉 식 |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시민연대 공동대표
- 옛 전남도청원형복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광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

## 김 지 원 |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자문위원
- 광주 서구청 문화예술진흥위원
- 전)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 전)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

## 조 덕 진 | 무등일보 논설실장



- 광주시 건축정책 위원
- 광주여성재단사 이사
-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추진단 위원
- 전) 광주시립미술관 운영위원

## 이 당 금 | 푸른연극마을 대표



- 대한민국소극장페스티벌운영위원
- 광주일보 칼럼, kbs 랜선필진
- 광주카톨릭평화방송 “이당금의문화마실”
- 공연문화예술기획자

## 정 두 용 | (사)청년문화허브 대표



- 상상실현네트워크 공동대표
- 전)광주시 청년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시막여부 비밀우체국’, ‘거시기’ 등 공공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



## 문화전당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연대를 위한 제언

황병하 | 조선대 명예교수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별)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유효기간이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되었다. 현재 문체부는 문화전당의 직제 개편과 인력 확대, 그리고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 고용승계 방법 등에 관해 행안부 및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정부의 긍정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기대하고 있지만, 문체부가 현재까지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문화전당이 지역사회와 새로운 연대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문화전당과 지역사회가 합리적인 동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당 내 지역협력 추진체계 설치와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2. 지역협력 추진체계 구축은 문화전당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문화원은 조직 내에 지역협력팀을 설치하여 2019년 기준 지역사회 소통 프로그램 14건, 지역협력사업 프로그램 11회, 1팀 1지역사랑 사업 157건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지역사회 소통 프로그램 16건, 지역협력 추진과제 49개를 시행하였다. 문제는 문화원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전당 내에는 지역협력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문체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직제 개편안에 지역협력 부서가 논의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체부가 진정으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동반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원한다면,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지역협력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전당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해야 하며, 자문위원회와 지역협력위원회에도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대변해야 한다.

3. 지역사회 맞춤형 협력프로그램의 확대 요구는 지금까지 문화전당이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문화원과 달리 전당은 지역사회 문화예술 단체나 전문가, 그리고 대학 등과 적극적인 소통 및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으며,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의지가 부족했고,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전당은 지역사회가 요구했던 전당 내 시설, 장비, 기술 등에 대한 공유 노력도 부족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는 문화전당 설립으로 기대했던 지역사회 문화예술 공유 기회 확대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 창출,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전당은 지역사회 맞춤형 협력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정례화해야 하고,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며,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 대학과의 협력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

4.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 요구는 지금까지 전당이 일방적인 top-down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전당의 전체 과제 중 지역사회 단체 및 대학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매우 적었다. 이는 전당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대화가 부족했으며, 지역사회 맞춤형 공동과제 발굴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정을 공론화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창구가 상설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기 전 전당은 지역사회 단체와 시민의 사전 사업 공모제 및 예약제를 실시할 것과 지역사회 우수과제 공동발굴 및 사업 참여 할당제 (30%) 실시를 제안한다.

## 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제언

김지원 |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I.

### 1. 아시아문화전당 소개

#### ■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 ACC는 아시아 과거-현재의 문화예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념이 만나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 교류기관
- ACC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아시아 각국과 함께 동반성장하고자 설립.
- ACC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참여자들이 연구(Research)-창작(Creation)-제작(Production)의 단계를 수행함에 있어 경계를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화합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통합적인 플랫폼의 역할
- ACC에서는 수집된 연구물과 자원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결과물로 1년 내내 다양하고 역동적인 프로그램(전시, 공연, 교육, 축제, 기타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 2 주요 사업

#### ● 아시아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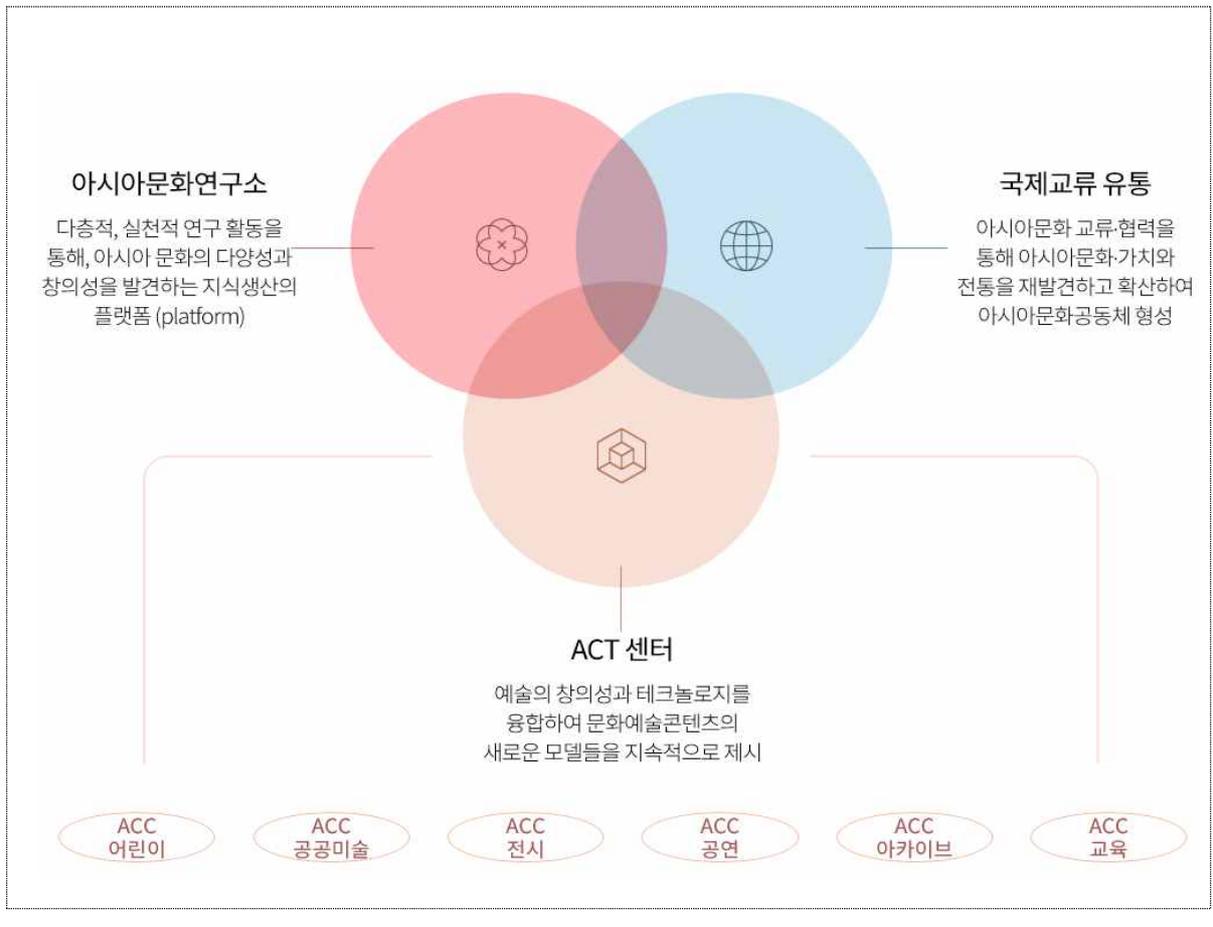
- 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창작소재의 보고(寶庫)연구(R) 단계의 시작점인 '아시아 문화연구소'는 창제작에 활용되는 아시아 관련 배경지식과 문화원천 소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타 연구소와의 차별성
- 아시아 문화를 새로운 창작소재로 발굴하기 위한 심층 연구를 진행하며, 문화창조와 기획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 토대와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실용적 차원의 연구를 수행

#### ● ACT센터

- 전 세계 창의적 인재의 네트워크 플랫폼창작과 제작(C-P)의 단계가 진행되는 'ACT센터'는 창의성과 테크놀로지를 융합하여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지원하는 역동적인 생산기관
- 'ACT센터'는 예술가, 디자이너, 연구자, 엔지니어 등 전 세계의 창조적인 인재들 간의 지식과 기술, 경험의 교류의 플랫폼의 역할
- 매해 11월에는 'ACT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작업을 공유하고 예술+기술의 융합적 콘텐츠가 주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장을 마련

● 국제교류

- '아시아문화연구소'와 'ACT센터'의 활동은 활발한 국제교류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ACC는 'ACC\_R'이라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 세계의 창작작자, 연구자(학자), 아티스트를 국제공모하여 선발하고 이들이 자유로이 아이디어를 펼쳐 장르와 분야를 확장한 새로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지원
- ACC에서 제작된 작품은 전시, 공연,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ACC내에서 연중 펼쳐지며 그 중 몇몇은 'Made by ACC'의 이름으로 세계시장으로 유통
- 개관 첫 해의 결과로 ACC와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Esplanade), 시드니의 캐리지웍스(Carriageworks), 비엔나페스티벌이 공동 출자한 <만 마리의 호랑이>(10,000 Tigers) 등 ACC에서 공동제작한 19개 제작 작품이 42개국에서 145회의 해외 공연을 진행 중
- 또한, ACC는 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문화융성에 기여하고자 아시아문화예술 커뮤니티의 구심점이자 세계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의 수행을 위하여 전 세계 유수의 문화예술 기관과의 MOU 체결과 협력사업을 추진
- 아시아의 각국 정부 간, 문화기관 간, 전문가 간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시아의 '전통음악', '무용', '스토리', '창작공간' 관련 행사를 매해마다 진행하여 아시아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



## II.

## 1.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원 조직 현황

- 전당장, 4과, 정원 48명(전문임기제 16명 포함) \* 공무원 274명



- 문화전당 운영 기본정책·계획 수립,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협력 활성화,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작·개발, 아시아문화원 관리·감독 등

<‘아시아문화원’(아시아문화도시법 제28조)>

- (직제) 원장, 4본부, 1연구소, 1센터, 17팀
- (인력 규모) 정규직 97명, 공무원 153명 \* 정원 기준
- (조직 기능) 문화전당 위탁 사업, 콘텐츠 사업 실행, 창·제작 및 유통 활성화 등

## 2. 2021년도 사업 예산 : 총 636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B-A)	%
<b>사업비 총계</b>	<b>52,722</b>	<b>63,623</b>	<b>10,901</b>	<b>20.7</b>
□ 전당 콘텐츠 및 운영	51,471	62,714	11,243	21.8
○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b>27,086</b>	<b>31,351</b>	<b>4,265</b>	<b>15.7</b>
• 창제작·전시·공연	14,359	17,956	3,597	25.1
• 교육	5,219	5,578	359	6.9
• 민주평화교류원 운영	900	677	△223	△24.8
• 교류협력 및 조사연구	5,930	6,282	352	5.9
• 아시아창작스튜디오	678	858	180	26.5
○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24,385	31,363	6,978	28.6
• 전당시설 관리	11,470	17,981	6,511	56.8
• 아시아문화원 운영지원	7,387	7,449	62	0.8
• 전당 고객지원, 홍보, 마케팅	4,668	4,916	248	5.3
• 전당총괄운영체계 구축	860	1,017	157	18.3
□ 문화포털 구축(정보화)	909	909	-	-
□ 아시아문화역량강화지원(ODA)	342	-	△342	순감

### Ⅲ.

#### 1. 아시아문화전당 재개관 런칭

- 아시아문화전당 2008년 6월 기공식, 2015년 11월 25일 공식 개관
- 풍피두센터는 1977년 개관 당시 여러 면에서 충격파를 던짐. 파리라는 역사도시에서 초현대식 설계의 실험정신
- 매년 500만명 방문객, 7만점이 넘는 작품을 소장한 유럽 최대의 미술관으로서 시민들이 교류하는 도시의 일상적인 장소로 자리매김. 2023년 말 새 단장 준비 2027년 재개장
- 1997년 개관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소장품보다 미술관 자체가 유명한 미술관으로서 개관 특수
-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드는 2002년 9월 개관 2개월여 동안 개관 행사 개최 (22개국 1,300여명 아티스트 참여), 작년까지 4만 1천여회의 각종 공연행사 개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이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됨. 10년 이내에 개관전에 버금가는 런칭 행사로 국제적 위상 확보

#### 2. 연구, 교육, 창·제작, 교류기능 복합문화시설의 한계 극복

- 복합예술센터는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연주회, 연극, 오페라, 무용, 뮤지컬 등의 공연예술과 전시, 행사 및 강연 등을 치를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자 객석규모 1,200석 내외의 대규모 공연시설을 갖춘 곳으로 고급예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한 공간(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조 2항)
- 해외 벤치마킹 문화시설들과 차별적 기능 부각, 그러나 국제적 규모의 주력시설(미술관, 공연장 등)의 부재
- 향후 10년간 연구의 집적, 교육의 확산과 창·제작, 교류 플랫폼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위상 확보

#### 3. 공공기관의 일반성과 특수성

-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확산하는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과 아시아, 세계성을 지향하는 복합문화예술센터의 특수성 결합
- 문체부,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단과 같은 공적 창작지원, 문화예술 향유확대기능 대비↔ 공공성의 중간지대, 시장, 마케팅 등

#### 4. 여전히 직무대리 수장

- 개관 이후 지속된 직무대리 체제에서 책임경영 체제로 전환

## 국립기관의 위상과 역할 확립으로 세계적 문화기관으로 거듭나야

조덕진 | 무등일보 논설실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개정안 개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특법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한차례 개악을 거쳤다. 박근혜는 조성사업을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콕 짚어 법인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지역사회가 사활을 걸고 법인화 5년을 유예시킨 것이 바로 지난 아특법 개정안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의 절대적 의석에 밀려 당초 안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했고, 전면 법인화를 최대한 지연시켜, 국립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 기한이 지난해였다.

이전 개정안은 문화전당은 국가가 운영하고 일부 업무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는 내용이였다. 법인(문화원)에 5년 동안 ‘부분위탁’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문화전당이나 문화원에 ‘전부위탁’하는 것이었다. 얼핏 문화전당으로 통합도 가능한 것 아닌가 싶지만 이는 눈속임에 불과한, 법인화로 내모는 길이었다.

실제로 정부가 운영하는 문화전당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문화원 위탁업무나 문화원 인력이 더 많은 기형적 구조로 전개돼왔다. 소위 이원화 체제다. 전당 내부의 운영 갈등, 리더십 부재, 콘텐츠 부실 등 문화전당을 둘러싼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더구나 문화전당은 수장도 없이 임시구조 체제로 운영돼왔다는 점에서, 채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민간으로 떠 넘기는 모양새에 다를 아니었다. 당시 박 정권에 문화전당의 성패는 관심 밖이었고 어쨌든 일반 민간으로 넘겨 국가의 부담을 덜어버리겠다는 심산이었던 셈이다.

문화전당이 ‘문화’를 매개로한 도시발전,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역사적 실험이라는 점에서 이를 한날 전임 대통령 그림자 지우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천박한 국정철학을 반영했던 것이다.

더구나 이 과정을 거치며 문화전당은 불행하게도 ‘광주’로 국한되는 양상이었다. 문화예술의 위대함이나, 이를 통한 국제 교류, 이를 통한 연대를 도모해볼 틈도 없이 전당장도, 충분한 예산도 없이 법인화 기한이 다가왔고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법인화, 민영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당초의 초심, ‘예술을 통한 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으로 돌아가야한다는 목소리는 광주에서만 울려 퍼졌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예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전당장 직무대리는 지속됐다.

아특별 개정안(개약안) 개정에 국민의 힘이 반대하고 나섰다. 또 다시 지역시민사회 단체, 이병훈 의원 등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야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비는 넘겼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개정안은 현재 국립 문화전당보다 법인 아시아문화원이 더큰 기형적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두 기관을 통합하고 국립기관이 하지 못하는 수익사업 등을 전담할 '문화전당 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여 문화전당 재단이 이전의 문화원 역할을 하게되는, 이름만 재단인 문화원 노릇을 하게 될지 걱정이다.

이같은 개정안 이후 전당의 역할을 고민하는 논의가 지역차원에서 전개되는 것도 반갑지만 슬프다. 국가차원에서 고민과 연구가 진행돼야 마땅하다. 가본적이 없는, 새로운 길이고 중요한 길이라는 점에서다. 그것은 역량과는 전혀 다른, 정부의 의지와 관심의 척도라는 점에서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인력도, 재정도 문제다. 인력은 다시 논의해야하고 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 규모 및 증가율을 고려'해서 산정토록 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예산부족한 문광부 산하기관으로 머무르게 된 셈이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사회 다방면에 걸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왔다. 허나 핵심이라할 검찰 개혁은 뺏속까지 조직이기주의자인 전 검찰총장으로 인해 좌절됐고 외려 국민들만 갈라졌다. 신재생에너지, 뉴딜 정책 등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천명하고 추진해오고 있다. 허나 어느 것 하나 국민적 공감대 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고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 길에 국민적 공감대가 끝없이 왜곡되고 거짓은 사실인양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야말로 현정부의 소중한, 지속가능한 인프라로 키워갈 수 있고 그래야한다는 이야기다.

아시아권에서 세계 문화계가 한번 가보고 싶은, 작지만 의미있고 인간의 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

이제부터라도 만들어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무관심, 살아남으면 지원하는, 알량한 지역경쟁의 틀에 내몰지 말아야한다. 전당 직원들도 달라져야한다. 과거 문화계에 흘러다니던 전당이나 문화원 갑질 등의 헛 소문이 더 이상 유명처럼 떠돌아서는 안된다.

광주시민들은 문화전당이 살아남지 못하면 안된다는 절박감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 애면글면의 밤샘에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하여 어느날엔간 세계시민들이 아시아의 광주로 찾아드는 날을 꿈꿔본다.

##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한다”

이당금 | 푸른연극마을 대표

ACC\_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의 심장인 (구)전남도청에 터를 고르고 땅을 파헤치고, 건물  
물을 세우는 동안 무엇을 보았는지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허브를 선포한 ACC\_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그랜드 개관을 하기 위해,  
콘텐츠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동안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요?

이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다. 아특별 개정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확보, 조직 구축,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며, 전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제적으로 각  
광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뭔가 빠진 것 같고 밑빠진  
독처럼 허전한 느낌은 뭘까? 지역에 기반을 둔 ACC는 무엇인가? 설립 당시부터 ACC는 문  
화체육관광부 소속인데 우리가 왜 광주와 소통을 해야하지?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고위직 예술공무원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유럽등 선진국 예술가들을 초청하기에 분주하다.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공연과 전시를 초청  
한다. 지역교류는 말이 나올때만 기천만원씩 슬쩍 끼워준다 기우듯이. 지역문화와 지역예술  
가들이 점점 더 소외될 것이다. 예술 공무원들이 많을수록 예술은 창의적이지 못하고 자유  
롭지 않다.

광주는 도시자체가 랜드마크이며 5.18이라는 문화 정체성을 지녔다.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예술인과 교류하는 것이 왜 어려운 것일  
까?

왜 자꾸 불협화음이 나는 것일까?

광주 문화예술가들은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들을 한다.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예술가들이 주체가 되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광주  
지역관이 독립된 기구로 운영이 된다면 엉켜있던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될 지도 모른다.

광주비엔날레가 광주민주화운동의 사적지에 기념비적 규모의 장소특정적 전시연계와 지역  
작가 특별전, 포트폴리오 리뷰전, 지역내 문화공간 및 사립미술관 등 지역문화공간을 이용한  
전시 기획하여 우리지역 예술가 성장과 지역민의 관람을 유도해내고 있듯이.

코로나 19로 인해 일상적이었던 삶이 뉴노멀시대로 전환하고 공연예술계 또한 완전히 뒤 바뀌고 있다. 다수를 대상했던 방식들이 소수를 만나야 하고, AI 인공지능의 시대일수록 이 정보다는 순수의 감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지역에서 현안을 도출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지역예술계의 소리를 그저 듣기만 하지 말고 소통해야 하고, 지역문화를 보고싶은 것만 취사선택하지 말고 함께 연대해야 한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이 시작할 때라고 하는 말은 옛말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늦은 것이다. 더 이상 늦지 않아야 한다.

##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Love

정두용 | (사)청년문화허브 대표

### 1. <마케팅 측면>

#### ▶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Love.

- (90년대생들은 쓴 소리보단 칭찬으로 더 발전하는 세대라고 하던 말을 듣고 문득 전당이 떠올랐어요) 전당에 지금 필요한 건 쓴 소리일까? 관심, 응원, 격려일까?
- 문화예술NGO로서 전당은 칭찬할 일보단 쓴 소리할 일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게 사실. 하지만 문화예술 마니아인 정두용 개인으로서도 그랬나? 전당 마니아들을 결집하는 시스템 디자인. 소수의 팬들부터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 마이너스 방향의 영향력과 플러스 방향의 영향력의 균형이 필요
- 광주에 음식관광 다음으로 관광콘텐츠로 경쟁력을 가진 자원은?
- 광주에 가볼만한 곳 어디야? 했을 때 광주사람이 추천해 줘야 돼. 지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이 될 수 없어.
- (광주 사람들의 인식과 다르게) 외지인들은 문화전당을 방문하고 그 규모 등에 감탄하고 너무 좋다는 경우도 많아. 문화전당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활성화하면 좋겠어

#### 문화담론지 <창> 가을호 '정두용 원고 중 발췌-

... 필자가 8년째 허브에서 활동하며 느낀 건 우리 같은 시민 문화예술 단체들은 관에서 진행하는 어떤 사업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막는 '마이너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발휘하지만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플러스의 영향력'은 미비하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 포럼 등을 통해 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명석을 깔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느껴진다. 창작자로서 역할은 거의 없고 비평가의 역할만 한달까. 사실 어떤 기관이던, 어떤 지자체이던 비판할 논리와 문제점은 얼마나 많은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나름 노력은 한 것 같지만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등. 그런데 허브 활동을 통해 느낀 건 우리 시민 사회가 아무리 비판 또는 비난에 열을 내봤자 관은 시스템적으로 쉽사리 변하지 못한다(혹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문화예술 NGO들은 평론가, 심판, 코치로서의 역할보다는 선수(player)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 관을 선수로 설정하고 우리가 코치로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보다는 차라리 시민사회가 선수로서 우리가 바라는 부분들을 실행해 나가고 관은 그에 대한 지원을 하는 응원단(supporter)으로 역할 하도록 주문하는 게 서로 우월한 관계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파트너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전 시대에는 시민사회의 감시·견제·비판 활동에 무게중심이 실렸다면 지금 시대에는 혁신을 만들어가는 선수로서의 역할로 중심이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 2. <콘텐츠 측면>

▶ 우리나라에 문화도시 아닌 곳이 어디? 역사문화도시 경주, 전통문화도시 전주, 영상문화도시 부산. 그 중 '아시아'문화도시 광주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나? 오로지 문화전당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상설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인지도가 생기고, 브랜드가 된다. Only One의 콘텐츠, 로컬 콘텐츠, 상설 콘텐츠

## 3. <시스템 측면>

- ▶ 시민과 예술인이 행복하려면? 직원의 행복이 그 시작
- ▶ 거버넌스 강화.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시스템 디자인



